

	<h1>보도자료</h1>	2021.12.17. (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변영위원회		
보도 : 2021.12.17.(금) 오전 10:00 이후	담당 : 김명기 간사 (010-5678-2099)	

이재명 후보 측,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 주민 보상 공약 발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더 특별한 보상’ 공약 패키지 제시

- 국방부 통제에서 국민의 품으로! △민간인통제구역 절반 축소 △군사시설 주변 보호구역 대폭 해제 통해 생활 터전을 지역민들에게!
- 특별한 희생에는 더 특별한 보상으로! △한강 변 지뢰및 철조망 제거 △접경지역 주민 우선채용 확대 △부대 인근 기업-군 부대 안정적 계약 추진 △군 미사용 부지 지자체 개발 확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적극 검토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 소음피해대책 수립 △지뢰지대 제거로 접경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국민과 군부대가 하나된 마음으로! △군 복지시설 민간 공유 △국방 R&D 시설 및 장비 산학연 공유체계 구축으로 민과 군이 윈-윈하는 구조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평화변영위원회 소속 스마트강군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와 국방안보특보단은 16일 공동으로 접경 지역과 부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접경지역과 군 부대 인근 거주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선대위 평화변영위원회는 “군으로 인해 군사주변 지역과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희생하시는 장면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면서 “희생에 보답하여 진정한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변영위는 민통선을 위로 올림으로써 민간인 통제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이들은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된 현대전 양상과 우리 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 변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서북도서 및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의 필요 없는 지뢰를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 보강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변의 철조망 역시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어 군부대 인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 해당 지역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둔 부대는 지역 내 기업 등과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군의 미사용 부지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노력도 군이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사격장 등 부대 주변의 군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방음공사,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은 물론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첫째로, 군의 주요 핵심 시설을 제외한 체육·복지시설 및 작전 도로를 개방해 시민과 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할 것이라 설명했다.

둘째로, 접경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방 R&D 시설과 기업, 대학, 민간 연구소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전체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 측의 접경지역 및 군 부대 인근 지역 공약 패키지에는 민과 군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주민의 바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공약 설명에 이어 “대한민국은 접경지역의 인고와 희생을 딛고 세계 군사력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섰다”며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인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스마트강군위원회_국방정책위원회_국방안보특보단

* 평화번영위원회 : 이종석 위원장(前NSC상임위원장)

* 스마트강군위원회 : 박종진(前1야전군사령관), 김운용(前지상군작전사령관)

황인권(前제2작전사령관)

* 국방정책위원회 : 김병주(前한미연합사부사령관), 모종화(前병무청장)

김정섭(前국방부 기조실장), 최병욱(現상명대국가안보학과 교수)

* 국방안보특보단장 : 이철휘(前2군사령관), 박선우(前한미연합사부사령관)

* 평화번영위원회 안보상황실장 : 김성일(前국방대총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이재명대통령후보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공약 발표문

#대한민국대전환,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유능한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민통선을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스마트강군위원회 박종진 위원장입니다. 스마트강군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국방안보특보단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스마트 자주국방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예비역 장성들은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강군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만이 우리 국방을 제대로 혁신하도록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국방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국방 구상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 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감사연설에서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군 생활 동안 우리 군으로 인해 군사 주변 지역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희생하시는 장면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하여 진정한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해 지역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멈춰버렸고,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침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민통선은 현재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km 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역사회의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넓히겠습니다.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된 현대전의 양상과 우리 군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의 작전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접경지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1. 한강 변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북 도서와 민통선 이남의 지뢰지대는 수습 개소에 육박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의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지뢰지대는 조속히 없애겠습니다. 필요한 지뢰지대는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한 한강 변의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경계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변의 철조망 역시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후방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주변의 지뢰 역시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을 현대화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켜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뢰 사고 발생 시에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지원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2. 접경지역 주민 우선채용과 안정적 계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 해당 지역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고, 접경지역의 주둔부대가 해당 지역 내 기업 등과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각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안정적이고 검증된 식자재를 군 급식에 공급하는 모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급식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 군의 미사용 부지를 지방정부와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군의 미사용 부지가 존재함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발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랐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군 미사용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각 지방정부가 관광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 사격장 등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군 사격장 등의 주변 지역은 소음과 도비탄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방음공사, 소음 피해보상 등 다각도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군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민군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1. 군 복지시설을 민간과 공유하고 민군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사적 핵심 시설을 제외한 체육·복지시설 및 작전도로 등은 군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더불어 민간시설 공유를 통해 군부대 주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민군 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국방 연구·개발(R&D) 시설과 장비의 산·학·연 공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접경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철저한 보안 대책 하에 국방 연구·개발(R&D) 시설과 장비를 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접경지역의 인고와 희생을 딛고 세계 군사력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감내해온 고통에 마땅히 응답할 때입니다.

오늘 드리는 약속은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민군의 상생협력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인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이재명은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스마트강군위원회_국방정책위원회_국방안보특보단

*평화변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석(前 NSC 상임위원장)

*스마트강군위원회위원장: 박종진(前 1야전군사령관), 김운용(前 지상군작전사령관),
황인권(前제 2작전사령관)

*국방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주(前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모종화(前 병무청장),
부위원장: 김정섭(前 국방부 기조실장), 최병욱(現 상명대 국가안보학과교수)

*국방안보특보단장: 이철휘(前 2군사령관), 박선우(前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평화번영위원회 안보상황실장: 김성일(前 국방대 총장)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공약 Q&A

Q1. 민통선을 최대 절반으로 대폭 축소해도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 민통선은 북한군 침투에 의한 민간인 피해방지와 경계 등 군사작전의 편의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선으로, 여러 차례의 조정을 통해, '08년에 10km 이내로 축소하고,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중임.
- 군의 현대전 양상과, 첨단장비 활용이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민통선을 유지할 군사적 가치가 낮아짐. 특히, 군이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체제로 전환된 15년부터는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따라서, 사실상 작전적 가치가 저하된 민통선을 절반으로 축소하여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권 행사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Q2. 군이 작전상 지뢰지대를 설치했을 것이다. 전방 지뢰지대를 제거하면 군 작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 현재 서북도서는 30여곳, 민통선 이남에 20여곳, 후방진지 수습 곳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음.
- 서북도서와 민통선 이남의 지뢰지대는 작전성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지대는 남겨두고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이며, 작전상 필요 없는 지대는 조속히 제거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것임. 따라서, 군 작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 또한, 후방 지뢰지대의 경우에도 진지 경계를 위한 지뢰지대는 경계 대책을 강화한 뒤 조속히 제거하여, 등산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들 품으로 돌려줄 것임.

Q3. 병영시설을 민간과 공유하면 군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 공유되는 병영시설은 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도로 등 군의 중요 핵심 시설이 아닐 경우에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므로 군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시설도 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장병들의 복지도 강화될 것임.
- 오히려 주민들과 필요한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민군이 상생한다면, 오히려 국방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Q4. 오늘 발표가 이재명 후보의 접경지역과 관련된 공약의 전부라 볼 수 있는가?

- 오늘 발표는 군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일 뿐이며, 민군 상생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작은 시작일 뿐임.
- 우리 대전환선대위 스마트강군위원회_국방정책위원회_안보특보단은 군차원에서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발굴할 것임.

-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선 당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거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경기공약발표 10.3]

- 평화기반 확충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통일(평화)경제 특구법 제정, 판문점을 DMZ관광 거점 활성화, 경기북부 평화·생태관광활성화 등

[강원합동연설회 9.12]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금강산 관광 재개